

[ 종합·해설 ]

■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 의미와 전망

기업·인력 '탈 수도권' 극대화 포석

▷기업 지방유인책=유인책의 가장 큰 골간은 '세금 깎아주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이전, 창업기업에 현행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 13%, 초과 25%)을 내리거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10~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정부가 7일 내놓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한마디로 기업과 인력의 '탈(脫)수도권'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구상이 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부를 창출하는 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방으로 끌어 '지방화'를 가속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말 그대로 아직 '구상' 수준이다.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그 실천 정도가 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전기업의 세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어든 것이라든가 규제완화의 생각이다.

▷세수 감소, 문제 없다=규발위는 이날 발표자료에서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추가로 늘려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총 1조 2천억원 가운데 이미 5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진행 중이므로 기금과 민간자본유치사업(BTL) 2천억원 가량을 감안하면 5천억원 정도만 더 든다는 계산으로, 내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규발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의견상 비용일 뿐 조세지출로 불리는 감면규모는 들어있지 않다. 지난 2004년 법인세수 24조원 가운데 지방에서 걷힌 세수가 4조원이었고 감면기간이 장기인 점, 전체 재정소요액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면밀한 부담 추계를 요구하고 있다.

규발위 관계자는 "당장 1~2년내 기업 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 기업이 곧바로 옮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각종 조세감면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감면이 타당성을 갖는 지와 어느 정도 세수감소를 가져올 지에

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도시개발권' 논란 소지=법인세 대폭 경감 외에 도시개발권이 출자총액규제의 완화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개발권의 한 축인 수용권은 현재 기업 도시특별법에 이미 일부 허용돼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전

세수 수兆원 감소 대책 없어

기업에까지 공권력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의 기준에 비해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화 방안을 4월까지 확정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추진과제의 법제화가 제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아울러 지방의 발전 정도와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과 법인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여기에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 법인세 기준 최저한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최저한세율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3%(1천억원 초과분은 15%)이며 중소법인은 10%다.

평택 등 5대 공공분쟁

사회적 비용 1,340억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 시위로 각각 53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서문석 교수가 발표한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추산' 논문에 따르면 평택기지 반대 시위로 537억원, 부안 방폐장 반대시위 532억원, 새만금사업 반대 시위 159억원, 북한산 사패터널 반대 시위 57억원, 천성산터널 반대 시위로 5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적 비용은 시위대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제활동 비용과 경찰과 전·의경 동원에 따른 질서유지 비용, 교통지체 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지연 비용은 제외됐다.

평택기지 반대 시위의 경우 작년 9월까지 7만4천210명이 집회·시위에 참여하고 18만7천8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제활동 비용 103억원, 질서유지 비용 134억원, 교통지체 비용 29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최권일기자 cki@



주한 외교단과 악수하는 송민순 외교

송민순 외교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리셉션에서 참석 외교사절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美 FTA 요구 '의약품 특허' 일부 수용할 듯

김중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7일 실질적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혀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

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우리는 특허 신장하고(시판 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면 적절할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

의 경우 특허출원 뒤 허가당국의 심사과정을 거쳐 시판허가까지 3~5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특허 출원 뒤 심사기간을 제외해 실질적인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대표는 소고기 문제와 관련, 손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뒤 "저로서는 검역기관에서 관철하다 하면(미국 쇠고기를) 먹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실업계 특성화고 대폭 확충

■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이다.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설립하기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스쿨존 확대=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중·고 5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인문한국 프로젝트=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

대학 등록금 예고제 도입

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타=이 외에도 각 대학에 학생 선별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을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핵 동결-에너지 지원' 합의되나

6자회담 오늘 재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8일 개막한다. 지난해 12월의 2단계 회의 이후 50여일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 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호혜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외장국 중국은 지난 2단계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이 충분히 개선된 만큼 별도의 개막식을 갖지 않고 8일 오후부터 각국 수석대표 회동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협상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들은 북한의 핵 폐기 초기이행조치와 관련, 플루토늄 추가생산을 막기 위한 영변 5MW 등 핵시설의 가동중단 및 폐쇄와 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인력 수용 등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중단 및 폐쇄

의 대상으로는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에서 동결했던 영변 5MW 원자로와 핵연료봉 공장, 방사화학실험실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50MW 원자로 및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핵 에너지 지원과 관련, 북한이 중유 등 대체에너지의 내역을 적시해 요구사항을 제시할 경우 나머지 5개국도 향후 지원 방식과 원칙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 일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특정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5개국간 합의가 진전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은 대부분 7일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개막일인 8일 오전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육진 2월 1일 첫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1위 합격률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정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 시험특강 행정직 세무직 교정직 광주·전남 농업직 소방직 서울지방직 경찰직 기술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중개사 전문강의의 17년!! 공인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서울에서 초빙일류교수진 1:1 교육방식, 자습실 이용

국비훈련생 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정보화기초과정(2월12일 개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기타사항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무료문제풀이 개강 2월 15일 김중규 행정학문제풀이 특강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2007 국가직/지방직공무원 800여명 2007년 정기간행이 문제풀이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 2일